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2007. 4

통일정세분석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2007. 4

전 성 훈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북핵정책의 전술적 변화	3
1. 정책 변화의 배경	3
2. 정책 변화의 성격	4
3. 정책 변화의 목표	5
III. 주요 현안별 입장 분석	7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7
2. 비핵화와 북·미 수교의 상관관계	9
3.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11
4. CVID, PSI 및 유엔안보리 제재	12
5. 대북 강경책 회기 가능성	14
IV. ‘2·13 합의’ 이행 전망	16
V. 북핵문제 예상 시나리오	18
1. 북한의 핵보유 상태 지속	18
2. 先 북·미관계 진전, 後 핵폐기 모색	19
3. 무력사용 및 강압적 핵폐기	19
4. 신속하고 평화적인 핵폐기	20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

I. 문제제기

- 미사일 발사('06.7.5)와 핵실험('06.10.9)으로 가파른 상향곡선을 그리던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북·미 베를린 양자회담('07.1.16~18)과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의 초기조치 합의('07.2.13)로 주춤해지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상황의 국면전환이 이루어짐.
 - 또한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까지 복원되면서, 적어도 외견상 '북핵'을 고리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제2단계 5차 6자회담('06.12.18~22)까지만 해도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회담이 불과 두 달도 안되어 돌파구를 찾은 것은 북·미 베를린 회동이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이 회동을 전격 제의해서 협상의 물고름 튼 것은 바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부시 행정부였음.
 - 부시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되어 있던 2,500만 불의 불법자금을 전액 동결 해제한다고 발표했고('07.3.19),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었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서도 과거의 엄격한 정보판단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줌.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고, 이는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대한반도 정책 전환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야기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음.
 - 2006년 5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전상태의 종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온 이후,¹⁾ 미국

1) 보도의 요지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과 젤리코(Philip Zelikow) 자문

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06.11.18)에서 부시 대통령이 '남북한·미국
3자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²⁾ 한반도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본 보고서는 '2·13 합의'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나아가 대
한반도 정책 변화의 배경과 성격 및 목표를 규명하고, 새로운 정책 하
에서 주요 현안과 '2·13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예상하며,
이를 토대로,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를 예측·제시하고자 함.

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북 포괄접근 방식은 비핵화 노력과 대북 금융제재를 지속
하는 동시에, 정전상태의 종식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임.
David Sanger,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8, 2006.

- 2) 스노우(Tony Snow)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November 17,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
releases/2006/11/print/20061117-16.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6.html)>.

II. 북핵정책의 전술적 변화

1. 정책 변화의 배경

- <①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입지 악화>: 임기를 2년여 남겨둔 부시 행정부가 처한 대내외 정치상황이 지난 6년간 견지해 온 북핵정책의 원칙을 일부 바꿔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음.
 - 이라크 전쟁의 실패,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정세의 불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북한의 핵보유 등으로 인해서 외교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임.
 - 결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다급한 상황인식 하에서, 그나마 해결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북핵문제에서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한 것으로 판단됨.

- <②북핵실험 이후 위기의식 고조>: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충격을 받고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현 상태에서 봉합하고자 함.
 - 특히 추가 핵실험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등 정치·안보적 차원의 파장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임.
 - 결국 10·9 핵실험 이후 ‘압박에 의한 북핵폐기 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됨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③김정일 정권의 핵포기 불가능 인식>: 북한이 리비아처럼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추가 핵능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④미사일·핵 실험 이후 대북 영향력 증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되었는바, 이를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핵물질의 추가 생산과 확산 방지’라는 제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영향력 증대의 원천은 6자회담 5개국 간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속이 강화된 것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된 것임.

2. 정책 변화의 성격

- <전술적 접근방법의 변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 핵능력의 완전 폐기라는 전략적 목표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구사하는 전술적 차원의 접근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임.
 - ①일부 원칙의 양보, ②핵폐기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인식, ③지역 전문가의 발언권 강화
- <①일부 원칙의 양보>: 부시 행정부 취임 초기부터 견지해 온 ‘先 핵포기, 後 보상’ 원칙과 ‘북·미 양자회담 불가’ 원칙 및 2005년 9월 이후 유지해 온 ‘금융제재 및 북핵문제 분리’ 원칙이 깨졌음.

- 최근에는 HEU 문제도 과거에 비해 관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됨.
- <②핵폐기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인식>: 북핵폐기를 몇 개의 요소로 구성된 과정으로 인식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임.
 - 미국은 다음 수순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①핵시설 폐쇄 → ②플루토늄 생산 중단 → ③HEU 프로그램 폐기 → ④핵무기 해체
- <③지역전문가의 발언권 강화>: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비확산, 대테러 등 기능주의 중심의 전문가로부터 국무부 중심의 지역전문가로 옮겨가고 있음.
 - 부시 행정부 1기의 백악관 NSC에서 비확산 전문가로 활약해 온 조셉(Robert Joseph)이 ‘2·13 합의’에 불만을 품고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차관보 직책을 사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³⁾
 - 이라크의 WMD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평가에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지역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는 교훈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정책 변화의 목표

- <①북한 핵능력의 동결에 주력>: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능력의 동결에 두고, 추가 핵실험을 방지하고 플루토늄 보유량을 현 수준

3) David Sanger, “Sensing shift in Bush policy, another hawk leaves,” *New York Times*, March 21, 2007.

으로 묶어두면서 핵물질·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데 주력함.

- 즉 북핵문제를 현 수준에서 봉합하고 기존 핵무기의 폐기는 뒤로 연기하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은 핵우산 제공을 통해 해결하려 함.

○ <②부시 행정부의 정치적인 업적 확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다급한 상황인식 하에, 가장 해결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 북핵문제에서 정책을 전환, 외교적인 성과를 도모함.

- ‘2·13 합의’로 북핵 위기상황을 봉합했다고 판단하는 부시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에 북핵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산적한 외교현안으로 궁지에 몰린 라이스 국무장관 역시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으로서 정치적인 업적이 필요하다는 계산 하에, 북핵문제를 그 돌파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음.

○ <③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손상 최소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북핵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이는 당면한 이란 핵문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핵문제를 봉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임.

Ⅲ. 주요 현안별 입장 분석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부시 행정부는 ‘先 비핵화 실현, 後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비핵화 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미 당국자들이 표명하는 견해는 이러한 기본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5년 여름경부터 미국 내에서 핵문제 하나만 해결하려는 협상방식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른 바 ‘포괄적 접근방식’(Broad Approach)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포괄적 접근방식의 핵심은 보다 큰 구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까지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포함한다는 것임.
 -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새로운 견해는 아니지만,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포괄적 접근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6자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는 합의가 가능했음(제4항).
 - 또한 ‘2·13 합의’에서 동북아 안보 실무그룹이 결성되었으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07.3.5~6)에서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판단됨.

- 부시 행정부 내에서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비핵화의 수단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라이스 국무장관, 졸릭(Robert Zoellick) 국무부장관, 켈리코 장관자문관 등 3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임.⁴⁾
 - 켈리코가 2005년 봄부터 라이스 장관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라이스 장관이 한·중·일 방문시 3국의 의사를 타진했으며, 당시 반기문 장관은 크게 환영했다고 함.
 - 2006년 봄 라이스와 켈리코는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개념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20일 후진타오와의 회담에서 부시는 김정일이 평화조약 체결을 원한다면 미국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 켈리코는 최근 ‘2·13 합의’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해답이라고 평가하고, 2005년 후반부터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염두에 둔 외교적 해법과 금융제재 등 압박조치가 동시에 구사되기 시작했다고 술회함.⁵⁾

- 부시 행정부의 이런 구상은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던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역시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연동해서 해결한다는 것임.⁶⁾

4) 후나바시 요이치, 『김정일 최후의 도박』 (서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pp. 569~576.

5) Philip Zelikow, “The plan that moved Pyongyang,” *Washington Post*, February 20, 2007, p. A13.

6) 예를 들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은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증진을 가속화하고, 다음으로 남북간 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며, 최종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해 나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2004년 3월 1일, p. 37.

- 한국은 2005년 11월 APEC 경주회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에도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를 강조해서 담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짐.⁷⁾
- 다만,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비핵화 실현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 수준 이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평화체제 구축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크다고 볼 수 없음.
 - 같은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의 ‘남북한·미국 3자 종전선언’ 의사 표명도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 실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전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핵정책의 전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혐오감이 크고 비핵화가 종전선언의 선결요건이 될 가능성이 큰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한 3자 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최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평화협정은 종전선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2. 비핵화와 북·미 수교의 상관관계

- ‘先 비핵화 실현, 後 북·미 수교’라는 기본 구도 속에서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 내의 지

7) 후나바시 요이치, 『김정일 최후의 도박』, p. 576.

배적인 입장임.

-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입장은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도 밝힌 바 있음(’06.11.28).⁸⁾

○ 평화협정 체결에까지 도달하는 절차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순서를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음.

- ①핵시설 폐쇄·봉인 완료 및 불능화 개시 → ②연락사무소 개설 및 비정부간 접촉 증대 → ③일정한 양의 무역 거래 개시 → ④핵시설 불능화 완료 → ⑤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 ⑥종전선언 → ⑦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 ⑧북핵폐기 완료 → ⑨수교 → ⑩평화협정 체결
- 다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이전에 일본인 납치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소수이긴 하나, 북핵폐기 심지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이전에 수교 및 대사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북·미 수교가 안정된 채널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비핵화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냉전 당시 미·소간에도 수교상태에서 주적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것임.

8) 버시바우 대사는 명지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함: 만일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있다면, 미국도 진지하게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을 생각할 것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음; 평화협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조선일보』, 2006년 11월 29일.

3.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HEU 프로그램을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
- HEU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과 관련,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당시의 정보평가와 현재의 정보평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디트라니(Joseph DeTrani)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07.2.27), 북한이 공장규모의 HEU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공장규모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힘.⁹⁾
 -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이 HEU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 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듯함.
-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HEU 활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보다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 ①비밀 HEU 프로그램의 노출에 따른 대외보안 강화,
 - ②HEU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9) 디트라니의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음: “While there is ‘high confidence’ North Korea acquired materials that could be used in a production-scale uranium program, there is only ‘mid-confidence’ such a program exists.” Glenn Kessler, “New doubts on nuclear efforts by North Korea,” *Washington Post*, March 1, 2007, p. A01.

- ③안보리 결의안 1540호와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등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확산방지 노력 강화
- 이와 관련,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집요함을 감안할 때, 설사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HEU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함.¹⁰⁾
- 결론적으로, HEU 문제는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미국이 확보한 정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예를 들어, 일본인 납치와 같이 실무선으로 책임을 넘기는 조치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실제 신고내용이 미국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북핵협상이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HEU 문제는 그만큼 파괴력을 가진 중대 사안임.

4. CVID, PSI 및 유엔안보리 제재

- ‘CVID’¹¹⁾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시한 새로운 북핵문제 해결방향인데, CVID가 아직도 유효하며, ‘2.13 합의’

10) HEU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①‘기체원심분리법’(Gas Centrifuge), ②‘기체확산법’(Gas Diffusion), ③‘전자기법’(Electromagnetic), ④‘노즐법’(Aerodynamic), ⑤‘화학적 교환법’(Chemical Exchange), ⑥‘레이저 농축법’(Laser Enrichment), ⑦‘플라즈마 농축법’(Plasma Enrichment) 등이 있음.

11)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의 약자임.

는 CVID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기본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공식견해와 달리, CVID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나 그 정신이 퇴조했다는 견해도 존재함.

- 적어도 불능화 완료시점까지는 CVID가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PSI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과거와 같이 PSI의 정치적인 의미를 부각시키지는 않겠지만, WMD 확산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활동은 조용하게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즉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WMD 확산 가능성에 대한 관찰은 지속될 것이고, 상황발생 시 적절한 차단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PSI가 불필요하게 정치이슈로 부각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2·13 합의’ 이후 미국 내에서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2·13 합의’가 결의안 1718호와 완전히 모순되고, 이로 인해 유용한 대북 채찍이 사라졌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결의안을 이행해주도록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북한보다 늦게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와 대비해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함. 이란의 경우, 최근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인 이란의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07.3.24)했음.¹²⁾

1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47*,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7/281/40/PDF/N0728140.pdf?OpenElement>>.

5. 대북 강경책 회기 가능성

-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2·13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시 행정부가 다시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임.
- <①강경책으로 회기할 수 없다는 견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가 다시 악화된다 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압박정책을 쓰기 보다는 중국,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임.
 - 이라크 사태의 중요한 교훈의 하나가 압박과 무력으로는 핵비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대남 보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력 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임.
 - 같은 맥락에서,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라크의 교훈을 감안, 김정일 정권의 인위적인 교체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¹³⁾
- <②강경책으로 회기할 수 있다는 견해>: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가 전술적인 차원의 변화일 뿐, 전략적인 목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강경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견해임.
 - 이런 견해의 바탕에는 ‘2·13 합의’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이었는데, 북한이 합

13)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핵포기는 불가피하게 경제, 안보상의 보상을 수반하는 바, 비핵화의 수단으로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Henry Kissinger, “A nuclear test for diplomacy,” *Washington Post*, May 16, 2006, p. A17.

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바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음.

IV. '2·13 합의' 이행 전망

- 미국 내에서는 '2·13 합의'의 이행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회의론이 혼재하고 있으며, 주요 논점은 아래와 같음.
- <①북한의 의도 평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2·13 합의'에 응한 주요 원인이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고립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듯함.
 - 김정일의 건강과 나이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와 대북제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의견도 있음.
- <②북핵폐기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북핵폐기는 비디오 게임처럼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함.
 - 불능화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태'로 간주하고, 핵폐기 단계에서는 핵무기의 폐기와 더불어 핵물질의 해외 반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다만, 불능화와 핵물질 신고가 완료되면 추가 핵물질의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③'2·13 합의' 이행 지연 예상>: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연전술을 구사, '2·13 합의'에 명시된 단계별 이행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측함.
 - 불능화 단계에서도 김빠기 전략과 지연 전략을 구사,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불능화가 완료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것으로 우려함.

- <④일본 정부에 대한 배려>: 부시 행정부는 핵실험 이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 온 일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2·13 합의'를 적극 이행하더라도 최소한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고위급 특사의 방북을 포함, 대북관계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

- <⑤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비판>: 미국 내 일각에서는 '2·13 합의'를 전후로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북한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핵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하자고 사정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미국이 북한에 '2·13 합의'를 이행해 주도록 사정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임.

V. 북핵문제 예상 시나리오

- 북핵정책의 전술적인 변화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예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임.

1. 북한의 핵보유 상태 지속

- <①상황 설정>: 북한의 핵보유 상태가 지속되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악화를 막았다는 정치적 수확을 거두는 반면,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함.
 -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불능화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음.
 -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의 대가로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진행,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유명무실화, 위폐제조·돈세탁·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과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 중단 등의 이익을 취함.
- <②부시 행정부의 입장>: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대신에 핵물질의 추가생산과 해외이전을 차단하는 데 만족함.
 - ‘2·13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할 지라도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13 합의’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간주함.
- <③정치적 배경>: 2007년 한국 대선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국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과 2008년도 미국 대선에서 북핵정책이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

2. 先 북·미관계 진전, 後 핵폐기 모색

- <①상황 설정>: 핵무기 폐기는 뒤로 미루고 핵물질의 추가 생산 및 제3국 이전을 차단하는 선에서 북·미관계 개선이 급진전 되고 수교가 이뤄지는 상황임.
- <②부시 행정부의 입장>: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북한 내부에서 조만간 체제전환의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서두르면서, 북핵정책의 우선순위를 핵무기 폐기에서 핵물질의 추가 생산 및 제3국 이전 방지에 두는 것임.
- <③정치적 배경>: 북한 내부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 대사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즉 중국의 독주를 막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미국 관리의 평양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임.

3. 무력사용 및 강압적 핵폐기

- <①상황 설정>: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전쟁불사를 배수진으로 치고서 북핵폐기를 실현하는 상황임.
 - 일차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으로 파괴, 핵물질의 추가 생산 능력을 제거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추가 압박을 통해

서 또는 강압적 협상을 통해서 포기하도록 유도함.

- <②부시 행정부의 입장>: ‘2·13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아서 강압적 핵폐기를 실행한다는 입장임.
- <③정치적 배경>: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부시 대통령이 ‘핵보유국 북한’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상황임.
 - 이란 핵문제의 전개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임.

4. 신속하고 평화적인 핵폐기

- <①상황 설정>: ‘2·13 합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시작으로 북핵 폐기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됨.
 - 북핵문제가 리비아 혹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②부시 행정부의 입장>: 북한의 핵 폐기가 기술적으로 불가역적인 단계에 오면 북·미 수교를 하고 이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까지 체결함.
 - 이 과정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할 것임.

- <③정치적 배경>: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의사를 확인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안보적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함.
 -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핵폐기 의지를 확신하고 북한이 원하는 다양한 보상을 제공함.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시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시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북한인권 :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Studies Series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5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3, 팩스 : 901-2543
인쇄처	도서출판 늘봄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7년 4월 일
발행일	2007년 4월 일
